LEE HUNG-CHANG'S VIEW OF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END OF 19TH
CENTURY

Koo Sun-hee,
The Korea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 머리말
2. 1870년대 李鴻章의 조선인식
3.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과 조·청 관계의 개편
4. 갑신정변 이후 李鴻章의 조선 ‘속방론’의 성격
5. 청일전쟁 이후 李鴻章의 조선인식
6. 맺음말

1. 머리말

현재까지 진행된 李鴻章의 조선에 대한 인식, 나아가 그 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요한 관건은 李鴻章이 전근대 조공-책봉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조선과 청과의 조공관계를 서구 근대국제법원리가 적용되던 근대 이후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려고 했는가의 문제이다. 즉 李鴻章의 조선인식과 관련한 것이다. 이제까지 근대 조·청 관계 연구를 분석하면, 전근대 조공-책봉체제에서 행해졌던 조공관계가 근대 이후에도 ‘유지’, ‘수호’ 또는 ‘강화’ 되었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간결하게 ‘종주권의 강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李鴻章의 조선인식을 연구한 성과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서구 근대국제법원리가 적용되던 근대 이후 조선과 청과의 관계에는 커다란 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李鴻章의 조선인식을 연구한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 이것은 동아시아사회가 소위 근대로 접어들 시기에 李鴻章이 조선정책에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인 조공-책봉체제를 의연하게 견지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서구 근대국제법원리를 적용하려 했는가, 이것도 아니면 서구 근대국제법원리를 이용해 기왕의 조공-책봉체제를 변질시키려했는가를 밝히면 해결 될 문제이다. 본고는 이 점을 중심으로 李鴻章의 조선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2. 1870년대 李鴻章의 조선인식

李鴻章은 중국이 1860년대부터 실시한 ‘자강’ 운동의 책임자였다. 그는 과거시험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고, 그 후 한림원에 근무하면서 編修까지 승진했다.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태평군에 대항하기 위한 병력을 소집하고자 고향인 安徽省으로 돌아가 신병훈련에 종사하기도 했다. 1864년 태평군이 완전히 진압되자 李鴻章은 江蘇省의 최고책임자인 巡撫가 되었다. 1870년 8월 李鴻章은 지방관리로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북경 주변을 관리하는 直隸總督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외국과의 교섭과 해안선 방비 등의 책무를 갖는 북양통상대신에 올랐다. 그는 또한 당시 중국에서 최고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淮軍’의 최고책임자였다. 1870년 이후 李鴻章은 대외정책에서 주요 결정자이며 수행자가 되었고, 그의 조선인식은 조선정책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1870년대 李鴻章의 대외인식은 1871년 중일수호조약체결과 1874년의 대만사건 등을 둘러싼 한, 중, 일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860년대 이후 양무운동 과정에서 청 관리들은 일본의 동향에 주목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일본론은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된다. ①일본은 신식 무기와 함선의 구입 · 제조 · 사용, 歐美로의 유학생과견 등 자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결과 열강의 침략에 대해서 중국보다도 유리하게 대처하고 있다. ②明代의 倭寇고사에 비추어 일본이 자강을 수행하여 강국화하면 중국에 위협이 된다. ③일본이 조선 병탐을 도모할 경우, 이 점에서 영국 · 프랑스 · 미국보다도 위험하다.¹ 李鴻章 또한 미국보다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위협을 중시하고 있었다.

¹ 佐々木揚, 1985. 12 「同治年間後期における清朝洋務派の日本論 - 李鴻章の場合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44(3), 東洋史研究會, 27-28쪽.

1870년 가을 일본은 청으로부터 구미열강들의 특권을 얻고, 청과의 대등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청·일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李鴻章은 일본은 ‘中土屬國’이 아니고 朝鮮·琉球·越南 같은 ‘臣服者’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자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중국의 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성사시켰다.² 그리고 일본은 이미 구미 각국과 입약통상을 하고 있으니, 이 예를 따라 청에 입약통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고 일본에 羈靡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李鴻章이 갖고 있던 청일조약 체결 목적은 청과 일본이 입약통상함으로써 ‘동심협력’하자는 것이었다. 李鴻章의 ‘聯日制西’ 추구는 청·일 조약 제2조에 상호 원조조항을 넣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李鴻章은 구미에 대항할 상대국으로 일본을 선택했고, ‘聯日制西’는 이후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서구 근대국제법질서로 전환하는 시기에 조·청·일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李鴻章의 대외인식의 기본이 되었다.

1874년 대만사건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李鴻章의 견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대만사건은 1871년 유구 표류인들이 대만인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빌미로 1874년 5월 일본이 대만을 침공하고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1873년 4월 일본의 副島鍾臣이 청에 파견되었을 때 隨員 柳原前光과 鄭永寧을 총리아문에 파견해서 조선과 대만 문제에 대해 청측 의견을 타진했다. 총리아문은 조선은 ‘속국’이지만 冊封獻貢의 전례가 있을 뿐으로 청은 그 ‘內政敎令’에도 ‘和戰權利’에도 간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만에 관해서는 生蕃은 “이를 化外에 두고 다스리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 政敎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柳原前光이 대만에 사신을 보내서 그 죄를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살해된 것은 청의 번속인 유구 국민이지 일본인은 아니라고 했다.³ 총리아문과 柳原前光과의 회담을 전해들은 李鴻章은 유구 난민사건에 관해서는 총리아문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조선은 중국 東土의 屏蔽이고, 청의 안전을 위해서는 江蘇, 浙江 보다도 조선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李鴻章은 청의 안전보장을 위해 조선이 청의 울타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근대 서구국제법질서 아래에서도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근대 서구 국제법질서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조선과 청의 관계를 바라보는 李鴻章의 조선인식이었다.

²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권79, 7-8쪽.

³ 佐々木揚, 앞의 글, 33쪽.

3.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청 관계의 개편

1880년대에 들어서면 조선과 청 사이에 전근대 ‘속국’ ‘속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관계의 개편이 필연으로 다가왔다. 조·청 관계에서 李鴻章은 조선이 속국인가를 물으면 ‘自主之邦’이라 답하고, 조선이 독립국인가를 물으면 ‘속국=조공국’이라고 답했다. 조선이 ‘자주국이나 독립국은 아니다’라는 李鴻章의 생각은 실제로 이 시기 청 정부 조직의 기능에서도 나타났다. 1880년대에는 조선문제에 대한 청 정부의 담당부서가 복잡했다. 禮部가 속국인 조선의 조공을 담당했고, 통상은 총리아문 혹은 북양대신이 관할했다. ‘독립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예부가, ‘자주다’라는 부분을 총리아문 혹은 북양대신이 담당했던 것이다.⁴ 그렇다면 李鴻章은 서구 근대 국제법질서 아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청 관계를 개편하고자 했을까. 李鴻章은 조선을 구미제국과 입약통상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견제하고자 했고, 또한 이를 통해 조선이 과거로부터 여전히 청의 속국임을 주지시키고자 했다. 즉 전통적 조공관계에서의 ‘속국’을 근대 국제법체제에서의 ‘속국’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조선의 문호개방 후 조선과 청의 관계는 기왕의 조공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관계에서 근대 국제법적인 관계로 전이하는 단계에 있었다. 조선과 청은 서로간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조선은 事大使行 폐기 등을 요구하며 만국공법적인 평등관계로 대청관계를 이끌어 나가하고자 했고, 청은 종래의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근대적인 속국체제로 대조선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여 이 과정에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장정’으로 줄여씀)이 체결되었다.

1882년 8월 23일에 全文 8조로 議定된 ‘장정’은 조선과 청 두 나라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장정은 조선 정부가 기왕의 조공관계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적인 평등관계를 지향하면서 맺고자 한 것과는 달리 청은 만국공법에 준하는 속국을 조선에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장정’은 조선에 대해서는 불평등조약이 되었고, 청은 이 장정을 통해 조선에 근대적 식민지배를 자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종속관계로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개편하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⁵

⁴ 위의 책, 356-359쪽.

⁵ 구선희, 앞의 책, 83-84쪽.

‘장정’ 체결을 주도했던 李鴻章은 속방과의 교역은 대등한 다른 나라와 같을 수 없다는 만국공법을 참작하여 ‘장정’을 체결한다고 했다. 따라서 ‘장정’ 체결을 통해 조·청 양국이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속국과 교섭하는 체통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藩服을 지키면서 이권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청 정부에 보고했다.⁶ 반면 조선측의 魚允中은 조선과 청 사이의 사대관계에 입각한 규정 내용이 다른 나라에 援用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개항장에서의 재판관할권문제와 양국 연안에서의 어채문제, 한성개장 및 內地採辦문제, 홍삼세출문제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⁷

그러나 청은 조·청 사이에 체결된 장정을 국제법에 기초한 대등관계의 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으로 규정했다. 청측은 ‘장정’이 서로 평등한 예를 하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과 달라 타국이 원용할 것을 염려하여 수정을 强請하는 것은 조선이 청과의 체제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일본을 두려워하고 청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타국이 ‘장정’을 원용할 것이 염려가 된다면 ‘장정’에 속방조관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⁸

청측이 속방조관 삽입을 조선측에 종용한 것은 속방조항을 명문화하여 다른 나라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李鴻章의 계책이었다. 李鴻章은 속방조항을 넣어 간접적으로 조선이 청의 만국공법적인 속국이라고 언명하고 이를 인정받고자 한 것이었다. 속방조항에 대해서 어윤중이 반대하지 않은 것은 조미조약 체결 당시 청이 조선에 강요한 속방조항을 김윤식이 그대로 수긍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외전략에서 기왕의 조선과 청과의 조공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는 선에서 청을 조선을 방위해줄 수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청이 조공관계에 가탁하여 조·청 관계를 근대적 종속관계로 개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단지 전래적인 조공관계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전래적인 조공관계에서는 공물을 바치고 의례적인 행사 몇 가지만 하면 청이 조선을 병합하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점이 바로 당시 대다수의 조선 인민이 가졌던 對清認識의 한계였다.⁹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李鴻章의 대리인으로서 조선에 파견된 袁世凱는 조선 내·외정에 공개적으로 간섭함으로써 조선이 청의 근대적 속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⁶ 『關係史料』 3, #594, 979쪽, #596, 987쪽.

⁷ 『關係史料』 3, #594-(2), 983; 『李譯』 권13, 38-39쪽.

⁸ 『關係史料』 3, #594-(3), 986쪽.

⁹ 구선희, 앞의 책, 85-87쪽.

4. 갑신정변 이후 李鴻章의 조선 ‘속방론’의 성격

李鴻章은 1885년 10월 청의 속방임을 자인하지 않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해서 속방의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袁世凱를 ‘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조선에 파견했다.¹⁰ 袁世凱가 조선에 오게 된 일면에는 청과 일본의 대조선정책에서 두 나라 사이에 야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갑신정변 이후 청·일 양국이 친진조약을 맺고 조선으로부터 양군의 공동철병을 규정한 상태에서 조선이 引俄拒清策을 표방하자 러시아의 남침을 우려하던 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일본 외무경 井上馨은 李鴻章에게 ‘朝鮮外務辦法’¹¹을 전달했다. 여기서 제시한 여덟가지 조목 가운데 여섯 번째 내용은 “중국은 서울에 주재하는 坐探國政大員을 현재 주찰하고 있는 대원보다 유능한 인물로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總辦常務委員 陳樹棠 대신 조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을 파견하라는 말이었다. 청이 주도해서 조선을 관리하라는 말을 듣자 李鴻章은 조선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기회로 여겼다. 이에 따라 李鴻章은 그의 대조선정책을 수행할 대리자로 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했던 것이다.

李鴻章은 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할 즈음 조선국왕 고종이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보존하려 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다투다가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친진조약으로 일본군의 철병이 이루어져 조선에서의 청의 독점적 지배가 가시화되려는 시기에 조선이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니, 그간의 조선에 대한 청의 정책이 善策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¹² 더 나은 방법이 袁世凱를 조선에 보내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었다.¹³

袁世凱를 파견할 때 李鴻章은 서양의 여러 나라는 속국에 주재하는 대원을 파견할 때 外部에서 文憑을 주고 있으므로 북양아문에서 袁世凱에게 명령했지만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총리아문에서도 袁世凱에게 ‘加札飭遵’해 줄 것을 청했다.¹⁴ 李鴻章이 袁世凱의 조선파견을 서양 여러 나라가 속국에

¹⁰ 『關係史料』 4, #1106, 2002쪽.

¹¹ 『일본외교문서』 明治年間追補 1, 357-360쪽; 『交涉史料』 권9, #(385)-부건5, 26쪽.

¹² 『交涉史料』 권9, #(410)-부건1, 13쪽.

¹³ 갑신정변 직후 袁世凱는 식민지 총독과 비슷한 監國을 조선에 파견해 조선을 직접 통치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 『交涉史料』 권6, #(376)-부건1, 20쪽.

¹⁴ 『交涉史料』 권9, #(410) 14; 『關係史料』 4, #1081, 1959쪽.

주차원을 파견하는 예에 따르고자 했다는 사실은 조선을 전통적 조공국이 아니라 근대 국제법상의 속국으로 간주했다는 뜻이 된다.

袁世凱가 총리조선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으로 파견된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에 조선정부 관료 중 한 사람이 청이 속방의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袁世凱를 파견하여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간섭하고 있어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의사를 각국에 표명했다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각국으로부터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들도 청이 袁世凱를 파견한 것이 영국이 속국에 派使하는 명목과 같다고 인지하고 있었다.¹⁵ 또한 조선주재 영국 영사가 袁世凱와 회담할 때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청과 속방은 형제국같은 것으로 근대 국제법에서의 속국과는 다르다. 따라서 청이 조선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管治할 수는 없다고 하자 袁世凱는 조선을 근대 국제법의 속국처럼 취급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¹⁶ 袁世凱가 무엇이라 항변을 했던 간에 조선 정부나 조선 주재 외국사절은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영국이 그의 속국 곧 식민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 袁世凱의 조선 내외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조선정부는 대외사절파견, 구미에 대한 차관도입정책, 관세운영권회복 시도, 청으로부터의 弔勅使 거절 등 반청정책을 펴나갔다.¹⁷ 특히 대외사절파견에 대한 청정부의 개입에 대해 조선정부는 완강히 저항했다. 자주적인 대외사절파견이 「屬國之分」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선 정부 뿐 아니라 개화사상가인 유길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저술인 「國權」¹⁸에 잘 나타나있다.

유길준의 「국권」은 1887년과 1889년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근대 국제법에서의 조공국과 속국을 구별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유길준이 「국권」을 쓸 당시 조선은 하나의 약소국으로 열강의 목인 하에 청의 조선에 대한 내외정 간섭이 극대화되고 있던 때였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대외사절파견에 대한 청의 방해였다. 유길준이 「국권」을 저작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나라는 청이었다. 유길준은 조선과 청의 관계가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전래적인 관계로 인해 서구 근대 국제법에서의 독립국간의 관계로 규정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두 나라 관계를 근대 국제법상에서 위치짓고자 했다.

유길준은 조선과 청 사이의 전래적인 조공관계를 근대 국제법에서의 조공관계로 대치시켰다. 그러자 조선과 청 사이의 종래 조공관계는 근대 국제법에 규정된 贈貢國과 受貢國 간의 관계와 유사했다. 당시 국제법의

¹⁵ 『關係史料』 4, #1106, 2002-2003쪽.

¹⁶ 『交涉史料』 권62, 54쪽.

¹⁷ 이 시기 조선정부의 반청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구선희, 앞의 책, 제3장 참조.

¹⁸ 「國權」 『兪吉濬全書IV -政治經濟編-』 25-46쪽.

進貢國 개념은 조·청 관계에 관철되었던 ‘속방자주론’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근대 국제법에서는 進貢 같은 봉건적 관계가 바로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았다.¹⁹ 나아가 유길준은 근대 국제법에서의 속국과 증공국을 선명하게 구별해 놓았다. 그럼으로써 속국과는 달리 ‘증공국’은 독립국이며, 이런 의미에서 청에 조공을 바치던 조선은 ‘증공국’으로서 대외적으로 자주독립국가인 동시에 청의 속국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유길준은 만약 증공국이 조공을 행하는 데도 수공국으로부터 권리를 침탈당하는 그러한 배반은 근대 국제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때는 조공을 끊을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李鴻章은 전통적인 조공관계에서의 ‘屬國之分’을 이용해 조선을 근대 식민지로서의 ‘속국’으로 개편하려고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통적 조공관계에 가탁해 걸음로는 전래적으로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대외에 천명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근대 국제법체제하에서의 속국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다. 袁世凱의 조선 내외정에 대한 간섭은 이런 맥락에서 실천된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袁世凱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李鴻章에게 袁世凱의 소환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李鴻章의 반응은 거절이었다. 그는 소환요청에 응하는 것은 ‘上國體統’을 잃는 것이며, 조선사정에 능통하여 일을 잘하고 있는 袁世凱를 교체할 경우 袁世凱만한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²⁰ 아울러 조선이 비록 각국과 訂約했다고 해도 청의 속방이고, 각국과 교체할 때 조선이 자주를 ‘冒稱’하는 것을 청이 관용한다고 해도 청과 교섭하면서 자주적인 지위를 내세우는 것은 조선과 청 사이 수 백 년 내려오는 명분과 기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조선의 君臣은 면전에서 따르고 마음으로는 어긴다고 조선 정부를 힐난했다.²¹ 李鴻章의 대조선정책은 조선과 청 사이의 전통적인 ‘屬國之分’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면서 조선을 근대 국제법에서 규정한 속국으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5. 청일전쟁 이후 李鴻章의 조선인식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간의 대립은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청 정부는 조선이 누대로부터 청의 속방임을 천하가

¹⁹ 웨튼(H. Wheaton)의 저서 『국제법의 본질(Element of International Law)』(런던, 1836, 64쪽)에서는 “조공국과 그리고 각기 봉건적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그들의 주권이 이런 관계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 한 여전히 독립국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다. 웨튼은 당시 국제법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의 한 사람으로 淸도 국제법에서 그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었다.

²⁰ 『李譯』 권19, 24-25쪽.

²¹ 『李譯』 권19, 55쪽; 『關係史料』 5, #1483, 2701쪽.

다 알고 있는데 일본은 조선 정부에 청의 藩服임을 인정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조선에 파병을 했으므로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전쟁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 각국에 선언했다.²² 청일전쟁의 목적은 속방인 조선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양 전투와 황해 해전에서 패배하고 이어 청군이 조선에서 물러나게 되자 李鴻章은 수도의 울타리인 발해만과 동쪽의 瀋陽을 방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런 후에 조선 수복을 계획하자고 했다.²³ 청의 동쪽 울타리인 속방 조선이 이미 일본에 점령된 이상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李鴻章은 청일전쟁 발발 직전 자신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귀국해 있는 袁世凱에게 총리조선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 및 일체 권한을 그대로 회복시켜 청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조선 민심을 수습하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후일 조선을 다시 청의 속방으로 회복시킬 준비를 하려한 것이었다.²⁴ 그러나 袁世凱의 조선과견은 청군이 조선에서 후퇴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청의 패배가 확실시 되던 1895년 1월 袁世凱에게 부여되었던 총리조선교섭통상사의 및 일체 권한이 폐기되었다.²⁵

청일전쟁에서 청이 연패함에 따라 일본을 조선에서 축출하고 조선을 속방으로 회복하려는 희망이 무망하게 되자 李鴻章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위해 국제사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그 가운데 속방 조선 포기와 조선의 독립 허용을 조건의 하나로 내걸었다.²⁶ 일본 또한 강화조약 조건의 하나로 청이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일전쟁 후 청일강화조약인 ‘下關係約’의 제1조에 조선독립이 명시되게 되었다.

‘下關係約’의 제1조에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고, 자주독립을 해치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貢, 獻上, 典禮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 고 명시되었다. 당시 청이건 일본이건 실제적인 ‘조선의 자주독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과 일본이 강화조약안을 협의할 때, 李鴻章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 강화조약 중에 이 문구를 기재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일본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이 제의한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할 것” 이란 문구를 수정해서 청·일 양국의 조선에 대한 권리가 평등 하게 나타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²⁷ 李鴻章의

²² 『日交渉史料』 권15, #(1262)-부건1, 34-35쪽.

²³ 『交渉史料』 권20, #(1630), 26쪽 ;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鴻章)全集』 奏稿, 臺北: 文海出版社(이하 『奏稿』로 줄여씀), 권78, 62쪽.

²⁴ 『奏稿』로 줄여씀, 권16, 59쪽.

²⁵ 『關係史料』 7, #2559, 4038-4039쪽.

²⁶ 『李譯』 권20, 54-56쪽.

²⁷ 김승일 옮김, 1993 『건건록』(陸奧宗光, 1929 『蹇蹇錄』 岩波書店) 범우사, 271쪽.

이러한 요구는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불식한다는 내용만 조문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아울러 일본에 의한 조선 지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李鴻章은 일본의 조선 점거는 프랑스의 월남 점거와 같아서 앞으로 청의 조선에서의 권리에 장애가 될 것²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조선이 청의 속방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청과의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대등한 조약체결을 하고자 조선 정부로부터 조약체결 요구가 있을 때도 李鴻章은 여전히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로부터의 조약체결 요구가 끈질기자 청 정부는 이에 대해 李鴻章에게 자문을 구했다. 李鴻章은 조·청 관계를 재개할 경우 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영사를 교환하는 등 통상관계에 한정시키되, 수호조약체결, 사신파견, 국서교환 등은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래야 속국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²⁹ 李鴻章에게 조선은 청의 영원한 ‘속국’이어야 했다.

6. 맺음 말

이상에서 동아시아가 전근대 조공-책봉 체제에서 서구 근대국제법원리가 관철되는 세계체제로 편입된 시기에 李鴻章의 조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근대 조·청 관계에 나타났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근대 조·청 관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李鴻章은 1870년 이후부터 북양대신에서 물러날 때 까지 25년간 중국의 내·외정과 군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대조선정책에서도 주요 결정자이며 수행자였다. 따라서 1870년대 이후 李鴻章이 갖고 있었던 조선인식은 대조선정책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1871년 청이 일본과 청일조약을 체결한 것은 일본과 청이 입약통상함으로써 ‘동심협력’하기 위한 것이었다. 李鴻章은 구미에 대항할 상대국으로 일본을 선택했고, ‘聯日制西’는 이후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서구 근대국제법질서로 전환하는 시기에 조·청·일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李鴻章의 대외인식의 기본이 되었다.

李鴻章에게 일본은 대등국이었고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청의 안전보장을 위해 조선이 청의 울타리가 되어야하고, 따라서 청 외의 다른 나라가 조선을 침탈하게 두어 둘 수 없었다. 李鴻章은 조선을 구미제국과 입약통상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견제하고자 했고, 또한 이를 통해 조선이 과거로부터 여전히 청의 속국임을 주지시키고자

²⁸ 『李譯』 권20, 55-56쪽.

²⁹ 『關係史料』 7, #3289-3, 4873-4874쪽.

했다. 즉 전통적 조공관계의 ‘속국’을 근대 국제법체제에서의 ‘속국’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이 결과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이 ‘장정’ 체결을 통해 李鴻章은 조선에 근대적 식민지배를 자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기점으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종속관계로 조선과 청의 관계는 개편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청의 속방임을 자인하지 않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해서 속방의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李鴻章은 袁世凱를 ‘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李鴻章은 ‘장정’으로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후 이를 빌미로 조선을 근대 국제법상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조선으로부터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袁世凱를 파견해 조선 내정과 외교를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袁世凱가 총리조선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으로 파견된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조선 정부나 조선주재 외국사절은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영국이 그의 속국 곧 식민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李鴻章의 조선 통제 정책은 청일전쟁으로 막을 내렸다.

청일전쟁의 목적은 속방인 조선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과 일본이 강화조약안을 협의할 때, 李鴻章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 강화조약 중에 이를 기재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일본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李鴻章의 이러한 요구는 조약안에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불식한다는 내용만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고, 일본에 의한 조선 지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청과의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대등한 조약체결을 하고자 조선 정부로부터 조약체결 요구가 있을 때도 李鴻章은 여전히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관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로부터의 조약체결 요구가 끈질기자 청 정부는 이에 대해 李鴻章에게 자문을 구했다. 李鴻章은 조·청 관계를 재개할 경우 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영사를 교환하는 등 통상관계에 한정시키되, 수호조약체결, 사신파견, 국서교환 등은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래야 속국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李鴻章에게 조선은 청의 영원한 ‘속국’이어야 했다.